

작성: 김진솔 연구원 (kim.jin.sol@ydi.or.kr)

## 1. 현황

-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지난해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년 대비 18.9% 증가한 923만톤
  -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, 회식 등이 어려워지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폭증(전년대비 이용액 78.6%↑),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늘어났기 때문
  -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67.4kg,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(유럽플라스틱제조협회(EUROMAP) 추산)
- 기후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며 탈(脫)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, 기업들도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친환경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
  - 기존 포장재를 생분해용기(PLA; Poly Lactic Acid)로 교체, 분리배출 쉬운 라벨프리 음료 출시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상품과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내놓는 추세
    - 일회용품 비중이 많은 편의점 업계는 생분해 빨대(GS25), PLA 용기 도시락·봉투(CU), 빨대 없는 컵커피(세븐일레븐) 등 친환경 상품을 앞다퉈 도입 및 출시
    - 2020.1월 출시한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 ‘아이시스 에코’(롯데칠성음료)는 기존 제품보다 200~300원 가격에도 올해(1~8월) 기준 1.3억개 판매
  - 특히 ESG 경영 강화로 기업들이 친환경을 비전으로 내세우며,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소비를 위한 여건과 환경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
    - LG화학, SKC, CJ제일제당 등에서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·분해성을 개선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, 국내외 PLA 수요증가에 발맞춰 사업규모를 확장
- 정부도 올해부터 탈플라스틱 정책을 본격화했지만 부실한 매뉴얼 및 관리체제로 국민·기업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비판
  - 2021.3월, 환경부는 <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>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으나 체계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

## 2. 문제점

○ 탈플라스틱 핵심은 순환경제인데 정부 정책은 생산·소비 규제에만 집중

- 현재 정부부처에서 내놓은 폐기물 관련 대책은 플라스틱 생산·소비만 규제할 뿐 △매립, △재활용, △후처리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실정

■ 환경부 <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>(2021.3月) 中 '폐기물 제로 순환경제' 주요내용

- 일회용품 감축: 배달용기 두께 제한, 비닐봉투 사용 규제 확대,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검토
- 플라스틱 감축: 한번 포장된 제품 재포장 금지, 과대포장 사전검사 및 제품출시 제한
- 재활용 순환체계 마련: 주류 등 투명페트 의무화, 재질구조 표준화 및 단일 재질화 추진, 페트병 별도 배출-선별-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 확대,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로드맵 마련

- 또한, 정부는 탈플라스틱 목표량만 제시했을 뿐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재활용 기준, 대체원료 확보방안, 생산자 부담금 증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미비
- 2020.12월 정부는 <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>을 발표, △(~2025년) 플라스틱 폐기물 20% 감축, 폐플라스틱 재활용비율 54→70% 확대, △(~2030년)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30% 감축, △(~2050년)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플라스틱으로 100% 전환 등 연도별 계획을 제시

○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개발하더라도 체계적인 폐기물 순환 시스템 및 매뉴얼 없인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

- 매립시 생분해되는 PLA 등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적정 매뉴얼이 없어 일반 플라스틱 처럼 소각처리되는 경우가 태반,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
- 해외의 경우 PLA를 처리하는 전문 산업용 퇴비화 단지에서 별도로 처리
- 일례로 차가운 음료를 담은 플라스틱 컵의 경우 잉크 한방울만 들어가도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해 분리배출하는 의미가 무색

○ 탈플라스틱화 전환 과정서 산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, 이에 따른 충격 최소화 방안도 부실

- 2019년 기준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체 1,322개 업체 종사자수는 약 39,222명으로 플라스틱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및 상당수 일자리가 소멸
-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으로 기존 플라스틱 업체들은 △생산 감축, △일자리 감소, △폐업 또는 업종전환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플라스틱 업체들은 △정부규제에 따른 생산규모 감축, △가공공정 등 제품설계 변경, △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기술적 대응, △생산자 부담금 증가 등 문제에 직면

### 3. 시사점 및 정책방향

#### ○ 생산·소비 규제 중심 정책만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

- 文정부의 어설픈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시민들의 참여의식, 기업의 친환경 행보가 무용지물로 전락
- 생산·소비 감축, 친환경 소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통일성있는 매뉴얼 마련을 통해 폐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되는 방안 모색이 긴급

#### ○ 탈플라스틱 실현을 위한 <순환경제 패키지 로드맵> 마련 시급

- 탈플라스틱은 ‘설계-생산-소비-폐기물관리-재활용’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졌을 때 유의미한 바 재활용 품질평가 기준 마련, 생분해 가능한 PLA 전문 산업용 퇴비화 단지 유치 검토 등 세부정책과제 수립이 시급
- 또한, 기존 업계에 올 타격을 최소화할 위해 품목전환 구조조정 지원, 직무 전환 직업 훈련 지원

#### ○ 자발적인 탈플라스틱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등 기반 조성

-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탈플라스틱 행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
  - 에코소비, 제로웨이스트 등 시민들의 노력이 기업의 행동,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
- 특히 환경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이 지대한 바 20-30대가 공감할만한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내놓을 필요